



독일 총리 중국 방문 후, 중국의 유럽지원 가능성 부각

왕양비 연구원

■ 2012년 2월 2~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이 유럽에 대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히는 등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.

● 종전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의 채권매입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, 원자바오 총리는 2월 2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유럽위기 해결을 위해 EFSF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.

- 2011년 10월 28일 EU 정상 간에 1조 유로 규모의 EFSF 기금 확대(안)이 합의된 후 EFSF의 책임자인 클라우스 레글링(Klaus Regling)이 중국을 방문했으나, 채권 구조의 불투명성 등 투자 안전성 우려로 EFSF 채권 매입에 대한 중국 당국자의 명확한 승낙을 얻지 못하였음.

- 메르켈 총리는 중국방문을 통해 중국 당국에게 2월 1일 통과된 역내 재정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재정협약 내용을 소개하면서 유럽의 위기관리 능력을 홍보하고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주력하였음.

● 2월 4일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럽에 대한 지원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고를 발표했는데, 이는 현재까지 유럽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가장 명확한 입장 표명임.

- 2011년 하반기부터 중국 국내 언론은 타국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국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유럽 지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계속 제기하였음.

- 원 총리는 동 공고 및 지방 고찰 강연에서 유럽이 중국의 최대 교역시장이자 기술 도입 원천이며, 유럽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유익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으며, 이는 당국이 유럽지원과 관련하여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
- 유럽은 원 총리의 태도 표명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나, 메르켈 총리가 중국이 원하는 정치 및 경제적 양보를 하느냐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.
- WSJ는 비공식적인 양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, 메르켈 총리가 지원 요청 이외의 기타 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분석했음.
 - 메르켈 총리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서의 강연에서 중국이 더반 기후변화 총회에서 탄소 배출량 축소 방안을 동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반면, 인권, 지식재산권, 시리아 문제, 이란 재제 등 문제에 대해 중국과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다고 밝혔음.
 - 메르켈 총리의 강연은 중국에서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, 2월 3일 중국 공산당 직속 신문 사인 인민일보는 이란에 대한 재제가 세계 석유시장을 교란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한다는 평론을 게재하였음.
- 양국 총리가 모두 유럽지원과 관련하여 가능한 논의 조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으나, 중국이 금번 유럽 지원을 계기로 유럽에게 완전시장경제 지위승인,¹⁾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금지 해제, IMF 내 위상 제고 등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일각에서 원 총리가 유럽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, 중국의 유럽지원 행보는 유럽이 중국이 내세우는 조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.

(인민일보 2/3, 서울 경제 2/3, WSJ, 2/5 등)

1) 완전시장경제 지위(full market economy status)는 반덤핑 산업피해조사(anti dumping investigation) 시 피조사국의 실제 생산비용과 가격을 기반으로 해당상품의 '정상가격'을 산출하는 필요조건으로 중국과 유럽 간 중요한 무역 협상 과제이며, 현재 대부분 유럽국가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유럽국가의 현지 생산비용과 가격이 피조사 중국 상품 '정상가격'의 계산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.